



조흥식

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제7차 장애인 실태조사결과와 장애인 복지정책에의 함의

보건복지부는 금년 4월 20일 장애인의 날을 맞이하여 「장애인실태조사」의 결과를 발표하였다. 이번 실태조사는 장애인복지법에 근거하여 1990년 1차 조사 이후 7번째 실시되는 조사로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을 통해 전국 38,560가구에 대한 방문 면접조사를 통해 이루어진 것이다. 이번 실태조사는 '제4차 장애인정책 발전 5개년 계획(2013-2017년)'(이하 5개년계획) 2차 연도인 2014년에 조사된 것으로 조사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 추정 장애인 수는 273만 명이고, 장애 출현율은 5.59%로 인구 10,000명 중 559명이 장애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2013년 말 기준 등록장애인 수는 250만명으로 장애인 등록율은 91.7%이며, 이는 2011년 93.8%에 비해 소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제7차 조사결과를 놓고 볼 때, 특별히 눈길을 끄는 점은 첫째, 전체 장애인구 중 65세 이상

노인의 비율이 2011년에 비해 증가하였으며, 장애인가구 중 장애인 1인 가구비율이 10년 전에 비해 2배로 높아진 점, 둘째, 주관적 건강상태로 특히 우울감 경험률, 자살 생각률은 비장애인에 비해 2배 이상 높았으며 연령이 높을수록 심각한 것으로 나타난 점, 셋째, 조사대상 장애인의 77.2%가 만성질환을 갖고 있고, 장애인 1인당 평균 1.8개의 만성질환이 있는 점, 넷째, 일상 혹은 사회생활에서 차별이 없다고 느끼는 장애인의 주관적 평가는 2005년 이후 긍정적 평가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 바, 분야별로는 학교생활, 결혼, 지역 사회 생활 등의 차별 경험은 감소한 반면, 취업시 차별 경험은 약간 증가한 경로를 나타난 점, 다섯째, 자신의 경제 상태에 대해 상류층 혹은 중산층으로 인식하는 비율은 32.6%로 지난 2011년 조사에 비해 약간(1.1%p) 높아졌으나, 여전히 전체 장애

인 가구의 67%는 자신의 가구를 경제적으로 어려운 저소득 가구(일반 가구의 1.7배)로 인식하고 있다는 점, 여섯째, 장애로 인한 평균 추가비용은 월 16만4천원으로 2011년 조사에 비해 2.2% 증가하였으며, 특히 저축, 보험 등 부모 사후 및 노후를 대비해 지출한 비용이 가장 크게 증가(3.4→10.2, 6.8%p)한 점, 일곱째, 장애인의 복지욕구는 지난 2005년 조사 이후로 소득, 의료, 고용의 순으로 나타나 큰 변화는 없으나 빠른 고령화, 만성질환 증가 등의 영향으로 소득보장 욕구는 점차 감소되어 가는데 비해 의료보장 욕구의 증가가 계속 높아지고 있는 점, 여덟째, 보육·교육과 관련해서는 장애아동 돌봄서비스 확대(17.4%), 고등교육 지원 강화(17.3%), 자녀의 생계대책(15.6%) 마련 등에 대한 욕구가 높았으며, 여성장애인의 경우 가사도우미(12.8%), 출산지원비용(11.7%), 자녀양육지원서비스(11.7%), 활동보조인(9.9%)에 대한 욕구가 높은 점, 마지막으로 장애등록 이후 복지서비스를 1번이라도 이용한 장애인의 서비스 경험 비율은 94.8%로 2005년 조사 78.9%, 2008년 82.1%, 2011년 94.5%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서비스 이용 경험이 많은 중증 장애인일수록 경증에 비해 국가와 사회의 정책 지원에 대한 만족도가 높은 점 등을 들 수 있다.

이러한 주요한 7차 조사결과가 향후 장애인복지정책에 주는 함의를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제4차 5개년계획에서 강조한 '장애 인지적 관점에서 장애인 삶에서의 권익증진과 자립생활 기반을 구축하는데 정책 목표를 두어야 한다. 즉 모든 장애인의 차별과 배제의 현실을 인식하여 장애인이 장애를 장애로 인식하지 않고 비장애인과

더불어 사회의 동등한 일원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실천해 감으로써 실질적인 사회통합과 권리실현이 되도록 해야 한다. 따라서 중앙정부를 비롯한 모든 공공기관은 장애인정책의 기획·집행·평가 전 과정에 장애 인지적 관점을 도입하여 추진해야 하며, 민간기관 또한 그러해야 할 것이다.

둘째, 전체 인구의 지속적인 고령화와 함께 장애인구도 지속적으로 고령화되고 장애인 1인 가구 비율이 높아지고 있는 현실을 고려할 때, 고령 장애인과 장애인 1인 가구에 대한 지원 대책 수립이 요구된다. 따라서 이들 고령 장애인과 1인 가구 장애인들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소득보장, 일상생활지원, 건강관리 등 특화된 장애인복지정책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제공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셋째, 조사대상 장애인의 77.2%가 만성질환을 갖고 있고, 주관적 건강상태로 특히 우울감 경험을, 자살 생각률이 비장애인에 비해 2배 이상 높고 연령이 높을수록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의료보장 욕구의 증가가 계속 높아지고 있는 점을 볼 때, 장애발생 예방 및 장애인을 위한 정신적, 신체적 의료보장정책 시행이 시급하다. 장애발생 예방 교육과 홍보 강화가 필요하며, 장애인 건강수준 향상을 위한 기반 마련, 의료재활 전달체계 확립 및 접근성 강화, 고령 장애인 맞춤형 재활프로그램 제공 등이 정책을 통해 시행되어야 한다. 그리고 질병, 사고, 재난 발생 시 즉시 대처할 수 있는 응급의료체계를 갖추는 등 종합적인 장애인 의료보장정책을 수립하여 추진해야 할 것이다.

넷째, 전체 장애인 가구의 67%는 저소득 가구로 인식하고 있고, 장애로 인한 평균 추가비용이 2011년 조사에 비해 2.2% 증가하였으며, 특히 저

축, 보험 등 부모 사후 및 노후를 대비해 지출한 비용이 가장 크게 증가한 점을 볼 때, 여전히 장애인의 경제적 문제는 심각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장애인의 생활을 보장할 수 있는 포괄적인 소득보장 체계 구축을 위해 장애인 소득에 대한 공적 보장 체계와 사적 보장체계의 협력모형을 개발하고, 간접적인 경제적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아울러 장애인 등급제와 부양의무자 제도의 폐지에 대한 전향적인 정책 방안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다섯째, 장애인의 복지 향상과 사회참여 확대를 위해 장애유형과 정도, 장애특성을 감안한 수요자 중심의 장애인복지 제공과 일자리 창출이 필요하다. 특히 이번 조사결과, 장애아동 및 발달장애아동 돌봄서비스 확대 욕구가 높고, 여성장애인의 경우 가사도우미, 출산지원비용, 자녀양육지원서비스, 활동보조인에 대한 욕구가 높은 점을 고려하여 이에 대한 특단의 정책 수립이 요구된다. 그리고 장애유형과 정도 등에 적합한 일자리 발굴·보급 등을 추진하고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의 업종을 다양화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이번 조사결과에는 나타나지 않았

지만 한국 주도의 “제3차 아태장애인 10년”(이하 인천전략)의 성공적 이행을 위한 장애인복지정책을 반드시 추진해야 한다. 인천전략의 주요 내용을 제4차 5개년계획 뿐만 아니라 제5차 5개년계획에도 반영하여 인천전략의 목표를 달성해야 하며, 중앙정부 각 부처들 끼리 긴밀한 협조체계를 유지하고 연계·조정 기능을 충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사실상 장애인복지정책의 핵심은 장애인 등록 단계부터 시작하여 전 생애에 걸쳐서 적극적인 서비스정보 제공 및 내실있는 정책 이행과 다양한 서비스 전달체계의 연계를 통하여 장애인이 실질적으로 복지정책의 혜택을 받는다는 점을 과부로 체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장애인에 대한 중앙부처 간 유기적 연계를 통한 체계적·종합적인 정책대응으로 장애인복지·권리의 사각지대를 없애야 할 것이다. 아울러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정부만의 노력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사회의 모든 구성원이 장애인에 대한 포용과 인권의식을 바탕으로 사회통합을 이루는데 힘을 쏟아야 할 것이다. ■